

기고

## 소년범죄, 보호처분 내실화와 처벌 강화를 병행해야



최원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대전소년원 담임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기간은 1~6개월 이내가 48.8%, 1년 이내가 30%다. 재범을 하는 아이들의 78.8%가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이다.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은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서 훈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 등의 기회를 얻지만, 재범을 한 아이들은 대체로 시설 내 처우인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원 처분은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여 인성교육 및 상담을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교과·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소년의 대부분은 퇴원 후에도 결손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환경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한데, 재범을 하는 아이들은 소년원 재원 중 오히려 비행성과 반사회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소년원의 수용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전국의 10개 소년원은 보호소년들을 1인실이 아닌, 4인 1실이나 1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호실에 수용하고 있다. 교육은 집단상담의 형태로 진행하고 생활은 1인실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시설환경이 필수적이지만,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소년원은 평일에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과 체험·체육활동을 진행하

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생활관 호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독서나 학습활동을 장려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앉아 서로를 배려하며 건전한 시간을 보내기는 쉽지 않다. 서열과 군대식 고참문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일부 고참행위를 하는 학생들은 교사들의 눈을 피해 욕설, 갈취, 협박,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고, 지도하는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규정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년원 퇴원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비행성과 반사회성이 심화된 학생들은 퇴원 직후 재범하고, 상당수는 시간이 지나 성인범으로 전이된다.

따라서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소년원

의 시설환경과 교육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보호 처분의 활성화·내실화는 소년사건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 등 소년사건 처리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그중 특정 강력범죄 2회 또는 일반 범죄 4회를 저지를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자는 방안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비행 초기 단계나 초범인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소년원에 와서도 다른 학생과 지도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호소년에게는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게 하는 처벌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